

광주 노래방 업주들 “생존권 보장하라”

광주시 민생 지원대상 배제 격분...시청 앞 항의집회

재난 지원금 지급·영업 시간 제한 현실화 개선 요구

광주 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광주시에 민생 안정 지원과 방역 지침 완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광주시지회·광주노래연습장동조합 회원 80여 명은 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 업주 1300여 명도 150만 광주시민이다”며 “지난 2일 광주시가 발표한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노래연습장 업종을 배제한 데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면서 생존이 벼랑 끝까지 몰렸다”며 “자발적인 휴무까지 하며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 안정

지원 제외, 시장 면담 거부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앞으로 광주시와 5개 구청이 추진하는 방역 지침에 협조하지 않겠다”면서 “실효성 없는 방역 지침 대신 영업 제한 시간을 업종에 맞춰 현실화하고,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은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집회에 참가한 단체 회원들은 ‘노래연습장은 밤 9시가 돼야 영업 시작된다’, ‘광주시는 각성하고 죽어가는 노래방을 살려내라’, ‘빛더미에 신용불량, 가정 파탄 책임져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영업시간 연장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항의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12차 민생안정대책 지원 대상에서 노래연습장이 제외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광주지회 회원들이 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시 방역당국의 민생 지원 제외와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된 데 격분, 재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자 시청을 3차례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시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삭발 투쟁을 비롯해 시청 앞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선 지난 2일 광주시는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

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2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에는 유흥업소와 종교 시설, 여행·문화·예술업계 등이 포함됐지만, 노래방 업종은 제외됐다.

서선옥기자

‘층간 소음 심하다’ 이웃집 문 손도끼로 부순 40대 입건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한다며 이웃집 출입문을 도구로 이용해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4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아파트 5층 한 세대 출입문을 캠핑용 손도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4층 세대 입주자인 A씨는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항의를 하러 이웃집을 찾았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 층간 소음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웃 A씨와 직접 마주치지 않았고, 경미한 재산 피해만 발생한 직후 곧바로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만 적용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이력을 확인, 가족과 협의해 행정입원 조치했다.

치매 앓던 70대 공터 배수지에서 숨진채 발견

인천의 한 공터 배수로에서 실종 신고된 70대 노인이 숨진채 발견됐다.

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18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인근 공터 배수로 옆 길가에서 A(73)씨가 숨져있는 상태로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앞서 지난 4일에는 A씨의 자녀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부검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범죄와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30대 기계에 끼여 숨져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 크레인(엔로더)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 A(35)씨가 기계에 몸이 끼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께 숨졌다.

A씨는 이날 엔로더 스커트를 교환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재 포항제철소와 A씨 소속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철소내 협력사 직원이 사망한 데 대해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골목길 갑툭튀’ 자전거 친 택시...민식이법 적용 벌금형

골목길 교차로에서 빠르게 튀어나온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택시기사에게 1십만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이른바 ‘민식이법’) 혐의를 받는 A(68)씨에게 지난 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하다가 8살 남자아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은 자전거를 타고 왼쪽 도로에서 빠르게 튀어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무릎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책임이 가법지는 않다”면서도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시의회 ‘난개발 방지 조례’ 시행 유예, 반발 확산

‘표고 100m 이상 개발·상업지구 용적률 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상임위 심의 거지며 ‘시행 한달 유예’ 부칙 추가...환경 단체 우려



무등산신양개울신축반대시민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안 즉각 시행을 촉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 의회는 표고 100m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용적률 관련 규제를 한 달 뒤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 의결에 나선다.

광주시의회가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조례 시행을 한 달 유예한 것과 관련해 반

발이 격화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 산업건설위원회가 올린 수

정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 고도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예외 없이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또는 생활 숙박시설 용적률을 4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등산 등 도심 녹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초고층 건물 난립 등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가 골자다.

그러나 시가 마련한 개정안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에서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로 수정됐다.

이날 오전 본회의 의결에 앞서 무등산신양개울신축반대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회의장 앞 복

도에서 손팻말을 들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붙은 ‘시행 한 달 유예’ 부칙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도시 난개발을 막을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산

업건설위원회를 거치면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에서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로 수정됐다. 실제 공포 시일까지 포함하면 두 달여간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정 내용 자체가 부실할 뿐더러, 지급 당장 시행해도 늦다. 이번 개정안이라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례 개정안 의결 직후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2019년 예도 조례를 개정, 규제를 강화했지만, 조례 개정 전에 많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건축 허가 접수를 마치고나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면서 “시행 한 달 유예는 건설업자에게 건축 개발 허가 신청 시간을 확보해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